

‘주민 반대 댐’ 신설 확정 늦춰...화순 동복 댐건설 미뤄질 듯

환경부 “주민과 소통 공감대 형성 11월 착성하는 댐만 건설 확정” 순천 옥천·강진 병영천댐은 건설

환경부가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추기로 했다. 주민 반대가 심한 화순군 동복에 용수 전용댐 건설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6일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에선 화순 동복, 순천 옥천, 강진 병영천 댐 등 3곳이 포함됐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화순 동복 댐과 강진 양구군 수입천 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은 설명회 추진에 실패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4곳 모두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댐들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밀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면서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댐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댐은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환경부는 이날 물 수급 전망 등을 공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기준 연간 물 부족량이 평균 17억

800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 총저수량의 61% 수준이다.

SSP5-8.5는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통상 ‘고탄소 시나리오’로 불린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2030년엔 생활·공업용수가 7억4천t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 유역만 따지면 3억 76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가 줄면서 생활용수 수요는 감소(연간 6000만t)하나,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공업용수 수요가 연간 11억t 늘어나면서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홍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일 경남 창원시와 전남 장흥군·강진군에 ‘500년 만에 한 번’, 대전 유성구와 충남 서산시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수준 등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댐 역할을 소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집중호우 때 강진군과 거제시에서 발생한 수해도 댐이 존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진군엔 병영천댐, 거제시엔 고현천댐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외에 다양한 대안도 검토했다고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 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반영된 댐에 대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목표...AI 국가 총력전”

尹, 국가인공지능위 회의 주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민간의 AI 투자 견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간 협력의 중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뤘던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간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재호 테세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컴퓨팅센터는 2곳 정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원으로부터 멀지 않아 송전 문제가 적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NBS 조사,尹 지지율 25%...국힘 28%·민주 26%

김여사특검법 찬성 65%·반대 24% 文 수사 ‘정치적’ 47%·‘정당’ 3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p 오른 69%였다.

국정 방향성 질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6%p 떨어진 25%였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2%p 오른 6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26%,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7%였다.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올랐고 민주당은 그대로였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7%,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47%였다. ‘검정회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65%가 찬성했고, 24%는 반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며 ‘두 국가론’을 제시한 가운데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54%였다.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7%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